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의 시민성 분석: 전환학습 관점의 평생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 다 희 (아주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에 나타난 시민성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선행연구와 5종의 정책문헌을 검토하고, Westheimer & Kahne(2004)의 시민성 유형론을 중심으로 정책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Mezirow(1991)의 전환학습 논의는 정책문헌에 나타난 성찰, 관계적 담론 및 관계 회복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보완적 관점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정책문헌에서는 생활 리듬 회복, 상담,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과 관련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참여적 시민성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 문헌에서 확인되었으며, 정의 지향적 시민성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프로그램 수준의 내용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문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에 나타난 시민성의 특성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적 함의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고립·은둔 청년, 시민성, 전환학습, 평생교육, 정책문헌 분석

I. 서론

최근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이나 일시적 적응 실패로만 설명되기 보다, 장기화된 사회적 배제와 관계적 단절이 누적된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노동시장 밖에 놓인 청년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을 확인할 기회를 상실한 청년들이다. 따라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생활 회복이나 취업 연계에 그치지 않고, 관계 회복과 참여 역량 형성의 측면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박정민·송현구·라수현(2025)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책 분석을 통해 현행 정책이 취업과 사회복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예선(2025) 역시 고립 청년에 관한 담론이 ‘미취업 청년’ 중심의 생산성 논리에 과도하게 포섭되는 경향을 비판하였다.

고립의 장기화는 경제적 취약뿐 아니라 관계 형성 능력의 약화, 사회적 신뢰의 붕괴,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참여 역량의 손상으로 이어진다. 조미형·고아라(2022)는 고립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를 분석하면서 취·창업 중심 정책이 자기 탐색과 관계 형성 능력의 회복이라는 핵심 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보았다. 김솔아 외(2024)는 경제활동 우선의 지원이 오히려 노동 소외를 반복시키고, 사회 복귀 의지가 낮은 청년에게는 접근성 높은 일상 회복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청년재단(2023)의 재은둔 조사에서 고립을 극복한 경험에 있는 청년의 58.8%가 다시 고립을 경험한 사실은, 단기 성과 중심 지원이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고립·은둔 청년을 문제 행동의 교정 대상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를 다시 배우는 성인학습자로 이해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한계는 고립·은둔 청년을 보호와 치료의 대상, 혹은 취업 준비가 미완결된 집단으로만 규정해 온 정책 패러다임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고립 청년을 권리 회복과 성장의 주체로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상준(2025)은 고립 청년을 단일 집단으로 다루는 보편적 정책의 한계를 비판하며, 지지체계 수준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 노혜진 외(2025)는 비수도권 청년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적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서비스 설계에서 청년의 성별, 학력, 거주 지역과 같은 조건을 반영한 세분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개입이 단순한 복지 전달을 넘어 사회적 권리와 참여 기회의 회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고립·은둔 청년 지원의 핵심은 개인을 기존 질서에 순응시키는 데 있지 않고, 자신과 사회를 바라보는 의미 틀을 재구성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는 학습자를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성찰과 실천을 통해 삶을 전환하는 성인학습자로 보는 점

근과 연결된다. 특히 학습공동체는 고립·청년이 안전한 관계 속에서 자기 경험을 말하고, 타인의 경험을 경청하며, 공동체와 다시 접속하는 관계 회복의 장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시민성 논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이 청년을 어떠한 시민적 주체로 상정하고 있으며, 정책문헌에서 관계 형성, 공동체 참여 및 사회구조 인식과 관련된 지원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평생교육과 시민성 교육의 교차 지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은 학술적·실천적으로 모두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 연구들은 고립·은둔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취업 연계,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 정책 사각지대 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고립·청년의 삶을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시민성의 관점에서 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검토하는 데까지는 충분히 나아가지 못하였다. 특히 평생교육과 시민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시민성 유형론을 분석 준거로 활용하여 정책문헌을 분석하고 전환학습을 보완적 관점에서 함께 논의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복지의 수혜자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과 참여의 가능성을 지닌 성인학습자로 개념화한 논의 역시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에 나타난 시민성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생교육적 함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최근 선행연구를 토대로 취업·상담 중심 정책의 한계를 검토하고, 둘째, Westheimer & Kahne(2004)의 시민성 유형론을 중심으로 분석 준거를 설정하며 Mezirow(1991)의 전환학습 논의는 보완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정책문헌에 나타난 지원 내용이 시민성 유형론의 분석 준거에 비추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생교육적 함의와 실천 방향을 논의한다. 이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에 나타난 시민성의 특성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책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적 함의를 논의하려는 시도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적 배제와 시민권 박탈의 관점

고립·은둔 청년을 둘러싼 초기 논의는 주로 개인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구직 실패와

같은 심리·행동적 특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고립을 가족, 학교, 노동시장, 지역사회에서 누적된 배제 경험의 결과로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박정민·송현구·라수현(2025)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시민권 박탈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송현구·박정민(2026)은 은둔·고립을 시민성이 작동할 사회적 관계 조건의 붕괴로 해석하면서 시민교육을 관계 조건 회복의 개입 경로로 제시하였다. 홍진주(2020)는 장기 니트 상태가 청년의 시민 참여와 주도적 삶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사회적 배제의 양상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고립을 개인 내부의 결함이 아니라 제도와 관계망에서의 탈락, 그리고 공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저하로 이해하게 만든다.

사회적 배제의 관점은 고립·은둔 청년이 경험하는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경제활동의 중단은 단지 소득 상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정의 상실과 참여 기회의 축소로 연결된다. 관계망의 축소는 다시 정보 접근성, 정서적 지지,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이는 재고립의 가능성을 높인다. 노가빈·이소민·김제희(2021)가 청년 은둔 경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가족관계, 학교와 직장의 실패 경험, 사회적 낙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고립은 단선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개인과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취업·치유 중심 정책의 한계

현행 정책문서에서는 취업 연계와 심리 상담을 중심으로 한 지원 내용이 주로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정책 집행과 성과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구성하는 관계적·사회문화적 차원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조미형·고아라(2022)는 일자리가 제공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작동하는 정책이 관계 형성 능력의 배양과 자기 탐색의 시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예선(2025)은 고립 청년을 생산성 회복의 대상으로만 호명하는 담론 자체가, 당사자를 다시 정상 노동 인구로 편입시키려는 강제적 자립의 규범을 재생산한다고 비판하였다.

심리 상담 중심 접근만으로는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김장근(2025)은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타인과의 실존적 소통 의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상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이 사회적 관계와 분리된 채 개별 서비스로만 제공될 때 회복의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김솔아 외(2024)가 제안한 온라인 기반 일상 회복 서비스 역시, 경제활동 이전에 생활 리듬 회복과 접근성 높은 관계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취업과 치유

중심 접근뿐 아니라 관계 형성과 사회적 참여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맞춤형 접근과 지역 격차에 관한 논의

최근 선행연구는 고립·은둔 청년을 단일한 집단으로 가정하는 정책 설계의 한계를 넘어, 유형화와 지역 비교에 기반한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상준(2025)은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화와 지원 방안」에서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지지체계 수준과 고립 양상에 따라 상이한 개입 방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만으로는 다양한 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혜진 외(2025)는 비수도권 청년의 서비스 필요도는 높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지역적 불균형이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장여반·천문권·허만세(2024)의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비교분석 역시 지역 간 지원 체계의 밀도와 운영 방향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이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성과지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지원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체계의 접근성, 지역사회 자원의 결합 방식, 참여자의 유형별 특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정책 분석에서 단순한 사업 유무나 예산 규모를 넘어, 정책문헌에 제시된 지원 내용과 관계 형성 방식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시민성 유형론의 적용 가능성

1) 개인적 책임감 있는 시민의 한계와 의의

Westheimer & Kahne(2004)는 시민성을 개인적 책임감 있는 시민, 참여적 시민, 정의 지향적 시민으로 유형화하였다. 이 가운데 개인적 책임감 있는 시민은 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며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시민을 의미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에서 이 유형은 규칙적 생활 회복, 정서적 안정, 취업 준비, 자기관리 역량 강화와 같은 목표로 구현된다. 실제로 분석 대상 정책문헌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 상담, 직무탐색, 취업역량 강화와 같은 지원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유형은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최소한의 일상 회복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랜 고립 상태에서 수면, 식사, 외출, 대인 접촉과 같은 기초 생활 기능이 무너진 경우, 자기조절 능력 회복은 후속 학습과 시민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만으로는 고립의 구조적 조건이나 공동체 속 관계와 역할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

2) 참여적 시민과 관계 회복의 중요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 기여하는 시민을 의미한다.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이 차원은 단순한 프로그램 출석을 넘어 또래 관계 형성,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집단 활동 경험, 공동의 과업 수행 경험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정상호(2024)의 교과서 분석은 우리 사회의 시민교육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을 보여주지만, 고립 청년 정책에서는 이러한 참여 경험이 아직 제한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효주·김민호·바트나상 난딩토야(2024)가 분석한 청년참여기구의 활동 경험이 보여주듯,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성 학습은 구체적인 참여 경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미형·고아라(2022)가 제안한 갭이어 성격의 다차원적 지원 역시, 자기 탐색과 더불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한다.

참여적 시민성은 고립 청년의 회복을 개인의 적응이 아니라 관계 회복과 참여 경험의 과정으로 보게 만든다. 이는 지역사회 활동과 소규모 학습공동체, 또래 기반 프로그램이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서 중요한 교육적 요소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안전한 공간과 공동체 활동은 청년이 실패 경험 이후에도 다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참여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3) 정의 지향적 시민과 비판적 주체성

정의 지향적 시민은 사회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변화를 모색하는 시민이다. 오고은(2023)은 한국 사회와 교과서가 인지적 영역과 신자유주의적 서술에 치우쳐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이 약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김형렬·유가현·정진리(2020)는 민주시민상이 점차 능동적·비판적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을 분석하였다. 이 논의를 고립·은둔 청년 정책에 적용하면, 정책이 고립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지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정의 지향적 시민성의 관점은 낙인 극복과 권리 주장, 정책 제안 참여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 준다. 고립 청년이 자신의 경험을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재해석할 수 있을 때, 회복은 단순한 적응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시민적 주체성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시민성 유형을 정책문헌 분석의 주요 분석 준거로 활용하여 각 정책문헌에 제시된 지원 내용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전환학습 이론과 평생학습적 접근

1) 의미관점의 재구성과 학습 전환

Mezirow(1991)의 전환학습 이론은 학습자가 기존의 의미관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더욱 포괄적이고 유연한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전환학습은 혼란스러운 딜레마, 자기 점검, 비판적 성찰, 새로운 역할 탐색과 실천의 단계로 전개되며, 학습자의 삶 전체에 걸친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최연이(2025)는 에너지 전환 교육프로그램 연구에서 비판적 성찰과 합리적 담론이 실천 의지의 변화에 중요한 매개가 됨을 제시하였고, 엄희영(2023)은 성인학습자가 부정적 의미 도식을 주체적 삶의 인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사례연구로 보여주었다. 박지은(2017) 역시 성인 성품교육 참여자들이 도구적 학습에서 내면적 성찰을 통한 해방적 학습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이론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단순한 행동 수정 중심의 접근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의미관점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고립 상태가 장기화된 청년은 스스로를 실패자, 낙오자, 무기력한 존재로 규정하는 의미관점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전환학습 관점에서는 이러한 자기 이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과거 경험을 새로운 정체성 서사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논의된다.

2) 심리적 안전, 성찰, 그리고 관계적 담론

전환학습은 단지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변화가 아니라, 타인과의 담론과 인정의 관계 속에서 심화된다. 권재경·김남규(2016)는 성인학습자의 생애전환에서 관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논의는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심리적 안정과 교육적 개입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기보다 안전한 관계 속에서 성찰을 촉진하는 학습 환경을 구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고립·은둔 청년의 학습을 치료 이후에만 가능한 과정으로 보기보다, 심리적 안전이 확보된 관계 속에서 교육적 경험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심리적 안전이 확보된 관계 속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포함한 현재의 삶에서도 참여 가능한 학습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세이 쓰기, 예술 기반 표현, 성찰 일지, 또래 대화, 공동 프로젝트와 같은 활동은 자신의 경험을 한 걸음 떨어져 성찰하도록 돕고, 동시에 타인의 경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 이러한 관계적 담론은 자기혐오와 낙인 내면화를 완화하고, 새로운 역할과 미래 가능성을 탐색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3) 시민성 회복을 위한 이론적 종합

시민성 유형론과 전환학습 논의를 함께 검토하면,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보다 정교하게 읽을 수 있다. 시민성 유형론은 정책문헌에 나타난 지원 내용의 특성을 시민성 유형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분석 준거를 제공하며, 전환학습 논의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보완적 관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전환학습은 시민성 유형론과 병렬되는 독립 기준이 아니라, 정책문헌에 나타난 성찰·대화·서사 재구성 요소를 해석하기 위한 보완적 관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 정책문헌이 생활관리와 취업 준비 중심의 지원 내용을 제시할 경우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동체 활동이나 또래 협력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포함할 경우 참여적 시민성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나 정책 참여와 관련된 지원 내용을 포함할 경우 정의 지향적 시민성과 관련된 요소가 확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정책문헌 분석의 절차와 시민성 유형론에 기반한 분석 준거를 제시한다.

Ⅲ.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5종의 정책문헌을 분석한 질적 탐색 연구이다. 본 연구는 정책의 적절성이나 우열을 평가하기보다, 시민성 유형론을 분석 준거로 활용하여 정책문헌에 나타난 시민성 관련 지원 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정책문헌에 제시된 정책 목표, 지원 내용 및 운영 방식이 어떠한 시민성 유형과 관련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평생교육적 함의와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의 이론적 준거를 정리하였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정책문헌을 수집·비교하고,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셋째, Westheimer & Kahne(2004)의 시민성 유형론을 중심 분석 틀로 적용하여 각 정책문헌의 정책 목표, 지원 내용 및 운영 방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Mezirow(1991)의 전환학습 논의는 별도의 분석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민성 유형별 분석 결과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보완적 관점으로 활용하였다.

1. 연구 설계와 분석 대상

1) 정책문헌 분석 설계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정책문헌 분석을 결합한 질적 탐색 연구로 설계하였다. 분석 대상은 고립·은둔 청년을 명시적 대상으로 하면서 정책 목표, 지원 내용 및 운영 방식이 문서화되어 있고, 동일한 분석 준거에 따라 비교 가능한 정책문헌으로 한정하였다. 문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립·은둔 청년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둘째, 정책 목표와 지원 내용이 문서화되어 분석 가능한가.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정책을 함께 포함하여 비교가 가능한가. 넷째, Westheimer & Kahne(2004)의 시민성 유형론에 따라 지원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이에 따라 최종 분석 대상은 총 5종의 정책문헌으로 선정하였다. 중앙정부 문헌은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과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집」이며, 지역 정책문헌은 「고립을 넘어 연결로: 인천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강화」, 「외로움 없는 서울」, 「2025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결과보고집」이다. 중앙정부 문헌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의 기본 방향과 주요 지원 내용을 보여주며, 지역 정책문헌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지원기관에서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운영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문헌은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실행 수준을 함께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초고 작성 이후에는 최신 정책문헌을 반영하고 연구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분석 대상을 구성하기 위하여 문헌을 재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문헌을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5종의 정책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단위는 각 정책문헌에 제시된 정책 목표, 지원 내용, 운영 방식 및 성과지표에 관한 서술로 설정하였다. 추출된 서술은 지원 내용의 주된 성격을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자기관리와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은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 또래 활동과 공동체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은 참여적 시민성, 사회구조 인식과 정책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은 정의 지향적 시민성으로 분류하였다. 하나의 지원 내용에 복수의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 내용의 1차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시민성 유형의 정의에 따라 코딩 결과를 재검토하고, 문헌 간 비교를 통해 분석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문헌과 지역 정책문헌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역별 실행 수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정책 영역이 지역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조 자료로는 청년재단의 재은둔 조사,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및 정책 성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정책문헌을 해석하기 위한 맥락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직접적인 코딩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종 분석 대상 정책문헌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분석 대상 정책 문헌

구분	발행기관	문헌명	발행연도
중앙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중앙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집	2024
지역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2025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결과보고집	2025
지역	서울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고립·은둔 대응 종합대책)	2024
지역	인천광역시	고립을 넘어 연결로: 2026년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행계획(보도자료 포함)	2025

* 출처: 연구자 작성(분석 대상 정책문헌 정리).

2. 시민성 유형 기반 분석 차원의 구성

본 연구는 Westheimer & Kahne(2004)의 시민성 유형론을 토대로 정책문헌을 분석하기 위한 세 가지 분석 차원을 설정하였다. 각 분석 차원과 주요 분석 지표는 <표 2>와 같다.

〈표 2〉 시민성 유형 기반 분석 차원과 주요 지표

분석 차원	주요 분석 지표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	자기관리, 생활리듬 회복, 진로·취업 역량
참여적 시민성	또래 활동, 공동체 관계 형성, 지역사회 연계
정의 지향적 시민성	사회구조 인식, 정책 참여

* 출처: Westheimer & Kahne(2004)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1)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

첫 번째 분석 차원은 Westheimer & Kahne(2004)의 시민성 유형론에서 제시한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이다. 이는 정책문헌에서 청년의 규칙적인 생활, 자기관리, 정서적 안정 및 진로 준비와 관련된 지원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리듬 회복, 상담, 자기관리, 진로·취업 역량 강화와 관련된 지원 내용을 주요 분석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 분석 차원은 정책문헌에서 개인의 자기관리와 일상 회복에 관한 지원 내용이 어떠한 비중으로 제시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이다.

다만 본 연구는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장기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일상 회복과 정서적 안정은 후속 학습과 사회참여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의 초점은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해당 유형의 지원 내용이 다른 시민성 유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비중으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하는데 두었다.

2) 참여적 시민성

두 번째 분석 차원은 참여적 시민성이다. 이는 정책문헌에서 청년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시민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주요 분석 지표는 또래 활동, 자조모임, 공동체 관계 형성, 지역사회 연계, 협력 활동 등이다. 또한 정책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의 의견 제시와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 차원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이 개인의 회복을 관계 형성과 공동체 참여의 과정으로 확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다. 정책문헌에서 또래 활동, 공동체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연계가 제시된 경우에는 참여적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정의 지향적 차원

세 번째 분석 차원은 정의 지향적 시민성이다. 이는 정책문헌에서 고립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구조와 제도적 맥락을 함께 다루고 있는지, 정책 참여와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기준이다. 주요 분석 지표는 사회구조 인식, 정책 참여,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토론 등이다.

정의 지향적 시민성은 정책문헌에서 사회구조 인식과 정책 참여 관련 지원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4) 전환학습의 보완적 관점

본 연구는 Westheimer & Kahne(2004)의 시민성 유형론을 정책문헌 분석의 중심 분석 틀로 적용하였으며, Mezirow(1991)의 전환학습 논의는 시민성 유형별 분석 결과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보완적 관점으로 활용하였다. 전환학습은 별도의 분석 차원이나 코딩 범주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시민성 유형론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보완적 관점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전환학습은 <표 2>의 분석 차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민성 유형별 분석 결과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보완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위치하였다.

3. 분석 절차와 해석 기준

1) 정책문헌 분석의 절차

분석 절차는 네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5종의 정책문헌에서 정책 목표, 지원 내용, 운영 방식 및 성과와 관련된 서술을 문장 또는 항목 단위의 분석 단위로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추출된 서술을 <표 2>의 분석 범주에 따라 1차 코딩하였으며, 복수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 내용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코딩 결과를 문헌별로 재검토하여 범주 적용의 일관성을 확인하였고, 동일한 분석 기준이 전 문헌에 적용되도록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별 코딩 결과를 비교하여 각 정책문헌에서 어떠한 시민성 유형의 지원 내용이 주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중앙정부 정책문헌과 지역 정책문헌 간 공통점과 차이를 함께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서술이 정책 목표, 지원 내용 또는 성과 관련 서술 중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전환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코딩 범주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시민성 유형별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찰, 대화, 경험의 재구성 등과 관련된 요소를 보완적으로 검토하였다.

2) 유형 해석의 준거

분석 결과는 시민성 유형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시민성 유형을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첫째,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은 상담, 취업역량 강화 및 생활관리 지원이 중심으로 제시되고 공동체 관계 형성이나 사회구조 인식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우이다. 둘째, 참여적 시민성은 커뮤니티 활동과 관계 회복 장치를 함께 포함하나, 사회구조 인식과 정책 참여 관련 내용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셋째, 정의 지향적 시민성은 사회구조 인식, 정책 참여 및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지원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앞 절에서는 정책문헌 분석 결과를 정리하기 위한 유형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기준을 토대로 각 정책문헌에 나타난 시민성 유형별 지원 내용의 특성을 제시한다.

각 시민성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발전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문헌에 나타난 지원 내용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 준거로 활용하였다.

IV. 정책문헌 분석 결과

앞서 제시한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 정책문헌을 검토한 결과, 생활 리듬 회복, 상담,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와 같이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이 여러

정책문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표 3>은 분석 대상 정책문헌에서 확인된 지원 내용을 시민성 유형별로 비교하고, 전환학습의 관점에서 해석 가능한 요소를 함께 정리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반면 참여적 시민성과 정의 지향적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은 정책문헌별로 포함 정도와 강조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이하에서는 각 분석 차원에서 확인된 내용을 제시한다.

〈표 3〉 정책문헌별 비교표

정책문헌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	참여적 시민성	정의 지향적 시민성	전환학습적 해석 가능성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	○	△	△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집	◎	○	△	○
2025년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결과보고집	◎	○	△	○
외로움 없는 서울	○	○	△	△
고립을 넘어 연결로(인천)	◎	○	△	△

주. ◎는 정책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에서 관련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경우, ○는 일부 프로그램 또는 지원 내용에서 확인된 경우, △는 제한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 시민성 유형은 Westheimer & Kahne(2004)의 시민성 유형론을 기준으로 정책문헌의 지원 내용을 연구자가 분석하여 분류한 결과이다.

주. 본 평정은 전환학습을 독립적인 분석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 시민성 유형별 분석 결과를 전환학습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를 표시한 것이다.

출처: 연구자 작성(정책문헌 분석 결과).

<표 3>은 정책문헌별 지원 내용의 전반적인 경향을 비교한 것으로, 시민성 유형의 상대적 비중과 전환학습 관점에서 해석 가능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종의 정책문헌 모두에서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참여적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은 일부 정책문헌에서 확인되었으나 정의 지향적 시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 수준의 지원 내용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1. 현행 정책의 운영 현황

1) 자기관리와 취업연계 중심의 정책 설계

5종의 정책문헌을 <표 2>의 분석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현행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에서는 생활 리듬 회복, 심리상담,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구직 준비와 같은 서술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자기관리, 정서 안정, 규칙적인 참여 및 취업 준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참여적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은 일부 프로그램에서 또래 활동, 집단 대화, 지역사회 연계 등의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정의 지향적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은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중심 항목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일부 지역 정책문헌에서는 또래관계 형성, 공동체 활동,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된 지원 내용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요소가 정책목표나 성과지표의 중심 항목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표 4〉 정책문헌의 시민성 유형별 지원 내용 분석

정책문헌	원문 프로그램 및 지원 내용	시민성 유형	분류 근거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밀착상담, 사례관리, 심리검사 및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	자기관리, 정서 회복 및 진로·취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원 내용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자조모임	참여적 시민성	또래 활동과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집	심리상담, 직무분석, 입사서류 컨설팅, 모의 면접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	심리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례
	지속적인 자조모임 형성, 구직자 간 정보교류	참여적 시민성	또래 간 관계 형성과 상호교류를 지원하는 내용
2025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결과보고집	상담, 생활습관 개선, 사회기술훈련, 일경험 및 취업연계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	일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내용
	자조모임, 가족자조모임, 동아리활동	참여적 시민성	공동체 활동과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
외로움 없는 서울(고립·은둔 대응 종합대책)	외로움 자가진단, 상담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	정서 지원과 자기 이해를 지원하는 내용
	365 서울챌린지, 서울연결처방	참여적 시민성	사회적 연결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
고립을 넘어 연결로: 2026년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행계획(보도자료 포함)	외로움 상담콜, 심리상담, 일상회복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	심리 회복과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
	자조모임, 공동체활동, 마음지구대, 마음라면	참여적 시민성	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내용

주. 시민성 유형은 Westheimer & Kahne(2004)의 시민성 유형론을 기준으로 정책문헌의 지원 내용을 연구자가 분석하여 분류한 결과이다. 정의 지향적 시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 수준의 지원 내용은 분석 대상 정책문헌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서술은 주로 정책의 목표 또는 추진 방향 수준에서 제시되었다.

출처: 연구자 작성(정책문헌 분석 결과).

<표 4>는 각 정책문헌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원문 프로그램 및 지원 내용을 시민성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문헌에 제시된 지원 내용이 어떠한 시민성 유형과 대응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관계 회복 요소의 제한적 반영

참여적 시민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정책문헌에서 자조모임, 동아리 활동, 공동체활동, 멘토링,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프로그램의 중심 항목보다는 보조적 요소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외부 연계활동과 자율활동이 이수와 연계되어 제시되어 있었고, 참여시간과 확인서류에 관한 관리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관계 회복과 관련된 활동이 프로그램 운영 및 이수 체계의 일부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또래 상호작용이나 지역사회 연결 활동이 제시되어 있더라도, 정책문헌의 서술만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장기적인 관계망 형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2. 분석 차원별 확인 내용

1) 정의 지향적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

정의 지향적 시민성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정책문헌은 고립의 사회적 원인이나 제도적 조건에 대한 이해보다, 청년 개인의 회복과 적응에 관한 서술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문헌에서 청년이 사업 설계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 개선과 관련한 참여 채널을 갖는 내용은 제한적으로 제시되었다.

2) 전환학습 관점에서의 해석

성찰, 대화 및 경험 공유와 같이 전환학습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는 일부 정책문헌에서 확인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정책의 중심 내용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요소는 정책문헌에서 주로 부가 활동이나 보완적 장치의 형태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종합하면, 분석 대상 정책문헌은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참여적 시민성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 문헌에서 확인되었으나 정의 지향적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은 제한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이 자기관리와 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며, 관계 형성, 시민

참여 및 비판적 성찰과 관련된 요소는 정책문헌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과 학술적 의의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문헌 5종을 대상으로 정책문헌 분석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시민성 회복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정책문헌은 생활 리듬 회복, 상담,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와 같은 지원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과 관련된 내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 또래 관계, 지역사회 연계, 성찰적 대화, 정책 참여와 관련된 서술은 일부 문헌에서 확인되었으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중심 축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Westheimer & Kahne(2004)의 시민성 유형론을 중심으로 정책문헌을 분류하고, Mezirow(1991)의 전환학습 논의를 보완적 관점으로 참조하여 정책이 어떠한 시민성 관련 지원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시민성 유형론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책문헌의 교육적 의미를 논의하였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가 주로 복지·심리·고용 중심에서 논의해 온 정책을 시민성 교육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였다. 또한 정책문헌 분석에 시민성 유형론을 분석 준거로 적용하고, 전환학습을 시민성 유형별 분석 결과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보완적 관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책문헌의 시민성 특성을 분석하고 그 교육적 함의를 논의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2. 정책 및 실천 제언

이상의 분석 결과는 현행 정책문헌에서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었으며, 참여적 시민성과 정의 지향적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은 제한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성 유형론을 분석 준거로 활용하여 정책문헌에 나타난 지원 내용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하의 제언은 이

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피어 서포터즈 기반의 회복 지원 체계화

첫째, 고립 극복 경험을 지닌 청년을 피어 서포터즈로 양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피어 서포터즈를 통한 동료 지원은 전문가 중심 개입이 제공하기 어려운 심리적 안전과 현실적 공감의 자원을 제공한다. 비슷한 경험을 거친 선배 당사자와의 만남은 고립 청년에게 회복 가능성의 구체적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지원을 제공하는 당사자에게도 사회적 역할감과 참여 경험을 회복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는 평생학습 현장에서 경험을 지식으로 전환하고, 당사자성을 학습자원으로 조직하는 실천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피어 서포터즈를 비공식 자원봉사 인력으로 소모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 활동비, 슈퍼비전, 정서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지역 기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둘째, 지자체, 청년지원기관, 평생교육기관, 복지기관, 민간단체를 연결하는 지역 기반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은 단일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일상 공간, 관계망, 학습 기회, 심리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기반 학습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박주홍·김남숙(2025)과 오세제·김동희(2021)의 논의는 지역사회 차원의 연결 체계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함을 보여준다. 또한 김은경·박상옥·박귀자(2021)의 연구가 시사하듯, 학습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지자체의 다각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김재웅(2018)이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지역적 맥락과 합의 도출 과정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평생교육의 관점에서는 개별 사업의 수적 확장 뿐 아니라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 관계 회복의 통로, 기관 간 연계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다.

3) 시민성 회복을 지향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코칭 매뉴얼 개발

셋째,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과 회복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 코칭 매뉴얼 개발을 하나의 실천적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매뉴얼은 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 또래 관계와 공동 학습 활동, 사회구조 인식과 시민 참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성찰 일지, 이야기 쓰기, 예술 기반 활동, 지역 프로젝트 참여, 정책 제안 활동 등을 연계하여 성찰과 학습의 기회를 구조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할 수 있다. 이러한 매뉴얼은 평생교육 현장에서 상담, 학습, 공동체 활동을 분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3. 맺음말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개인의 적응 실패나 복지 대상 관리의 관점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사회적 배제와 관계 단절 속에서 약화된 시민으로서의 참여 역량과 효능감을 어떻게 회복하도록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동시에 평생학습은 사회적 취약을 경험하는 청년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와 다시 연결되는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행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이 생활 회복, 상담,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와 같은 개인적 책임감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참여적 시민성 및 정의 지향적 시민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은 정책 문헌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성 유형론을 분석 준거로 활용하여 정책문헌에 나타난 시민성 관련 지원 내용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며,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정책의 교육적 가능성과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보다 정책문헌에 나타난 시민성의 특성을 분석하고, 시민성 유형별 분석 결과를 전환학습의 보완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평생교육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공식 정책문헌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현장에서 청년 당사자와 피어 서포터즈가 경험하는 상호작용과 실천적 역동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정책문헌을 대상으로 한 질적 분석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변화와 회복 경험, 실무적 조정 과정의 복잡성 및 정책 운영의 실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청년, 피어 서포터즈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과 참여 관찰을 포함한 질적 사례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가 축적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생교육적 해석과 실천적 함의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4).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집.
- 고용노동부(2026).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2025). 2025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결과보고집.
- 권재경·김남규(2016). 두 평생교육학 교수의 생애전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평생교육 · HRD연구**, 12(3), 31-56.
- 김솔아·김지수·성진루빈·정재희(2024). 고립·은둔 청년의 정신건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서비스 제안.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30(3), 81-93. <https://doi.org/10.18208/ksdc.2024.30.3.81>
- 김예선(2025).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담론 연구: ‘은둔형 외톨이’에서 ‘고립·은둔 청년’까지의 담론 변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 김은경·박상옥·박귀자(2021). 지자체 평생교육 담당자가 인식한 학습동아리 성장 지원 이슈. **평생학습사회**, 17(2), 1-28. <https://doi.org/10.26857/JLLS.2021.5.17.2.1>
- 김장근(2025). **철학상담의 관점에서 고찰한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야스퍼스의 ‘소통론’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 김재웅(2018).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특성과 난점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4(4), 79-110. <https://doi.org/10.26857/JLLS.2018.11.14.4.79>
- 김형렬·유가현·정진리(2020). 중·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 시민상의 변천: 제3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도덕윤리과교육**, 69, 375-410. <https://doi.org/10.18338/kojmee.2020..69.375>
- 노가빈·이소민·김제희(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https://doi.org/10.20970/kasw.2021.73.2.003>
- 노혜진·김민정·김아래미·이해님·최윤희(2025). 고립·은둔 청년의 서비스 이용 과정. **한국지역사회복지학**, 95, 99-129. <https://doi.org/10.15300/jcw.2025.95.4.99>
- 박정민·송현구·라수현(2025).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정책의 의의와 한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6(2), 147-183. <https://doi.org/10.22862/kjsr.2025.26.2.005>
- 박주홍·김남숙(2025). 부산 청년이 말하는 고립·은둔 회복방안: 지역기반 사회적 연결 체계. **사회융합연구**, 9(5), 49-61. <https://doi.org/10.37181/JSCS.2025.9.5.049>
- 박지은(2017). **성품교육 참여 성인학습자의 인식전환학습경험**. 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울특별시(2024). 외로움 없는 서울: 고립·은둔 대응 종합대책. <https://sihsc.welfare.seoul.kr/knockseoul/030101/C00002/contents.do> (검색일: 2026. 7. 26).
- 송현구·박정민(2026). 은둔·고립 청년을 위한 시민교육에 관한 기초연구: 시민성 관점에 기반한 조건 탐색. **한국사회**, 27(1), 47-91. <https://doi.org/10.22862/kjsr.2026.27.1.002>
- 신상준(2025).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화와 지원 방안. **도시연구**, 28, 63-102. <https://doi.org/10.34165/urbanr.2025..28.63>

- 신효주·김민호·바트나상 난딩토야(2024). 제주지역 ‘청년참여기구’ 활동 경험의 교육적 의미. **평생학습사회**, 20(4), 1-27. <https://doi.org/10.26857/JLLS.2024.11.20.4.1>
- 염희영(2023). **평생교육 심신통합 코칭프로그램에 참여한 암 환자의 전환학습 경험탐색**. 박사학위 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오고은(2023). 한국과 홍콩,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의 유형과 내용요소 비교 분석. **교육문화연구**, 29(2), 127-162. <https://doi.org/10.24159/joec.2023.29.2.127>
- 오세제·김동희(2021). 2021년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단계와 성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실태 분석을 통하여. **현대정치연구**, 14(3), 5-35.
- 인천광역시(2025). 고립을 넘어 연결로: 2026년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행계획(보도자료). <https://www.incheon.go.kr/lin/OHH050102/3064926> (검색일: 2026. 7. 26).
- 장여반·천문권·허만세(2024).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비교분석. **사회복지상담연구**, 8(2), 35-57.
- 정상호(2024). 어떤 민주시민인가? 민주시민의 유형에 따른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연구. **정치정보연구**, 27(1), 139-174. <https://doi.org/10.15617/psc.2024.2.28.1.139>
- 조미형·고아라(2022). 사회적 고립 청년은 누구인가? - 고립청년 지원사업 참여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4), 127-152.
- 청년재단(2023). **재은둔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청년재단.
- 최연이(2025). **전환학습이론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 교육프로그램이 성인 학습자의 실천 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홍진주(2020). **청년니트의 사회적 배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Westheimer, J., & Kahne, J. (2004). What kind of citizen? The politics of educating for democrac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1(2), 237-269. <https://doi.org/10.3102/00028312041002237>

저 자 정 보

서 다 희

Seo, Dahee

소 속: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

연 락 처: dseo@ajou.ac.kr

연구분야: 평생교육, 시민교육, 성인학습

<Abstract>

Analyzing Citizenship in Support Policies for Socially Isolated and Reclusive Youth: Lifelong Learning Implications from a Transformative Learning Perspective

Dahee Seo (Ajou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support policies for socially isolated and reclusive youth from the perspectives of citizenship restoration and lifelong learning. Drawing on an analysis of five central and regional policy documents, the citizenship typology of Westheimer and Kahne is employed as the primary analytical framework and the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of Mezirow is referenced as a complementary interpretive perspective. The analysis indicates that current policy documents primarily emphasize self-regulation, counseling, career exploration, and employability, which are largely associated with personally responsible citizenship. In contrast, content related to participatory and justice-oriented citizenship appears only to a limited extent in the form of peer activities, community engagement, reflective dialogue, and opportunities for policy participation. The study suggests three directions for lifelong learning practice based on these findings: strengthening peer-support systems, promoting region-based network governance, and developing customized lifelong-learning coaching programs for socially isolated and reclusive youth.

- **Key words:** socially isolated and reclusive youth, citizenship education, transformative learning, lifelong learning, youth support policy

접 수 일: 2026. 6. 29

심 사 일: 2026. 7. 21

게재확정일: 2026. 8. 5